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50
----------	------

제출연월일 : 2021. 5.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가. 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08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수정 및 인용 조문 개정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안 제1조, 제4조, 제5조제1~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및 제5~6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
- 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5조제4항, 제2장의 제목)
- 다. 행정기구 운영체계 변경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변경(혁신기획관 ⇒ 정책기획관) (안 제6조제5항제1호)
- 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08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 규정 개정 (안 제18조)
- 마. 부칙을 통한 시행일 지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1. 4. 9. ~ 2021. 4. 30. [21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예산담당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등에 따라”를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을 “법 제26조”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혁신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

제13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을 “교부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령과”를 “법령, 조례 및”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령 및 예산이”를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월별로”를 “추진상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법 제17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지방보조사업자에게”를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계산서”를 “정산보고서”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성과평가)”를 “(운용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2조의7”을 “법 제27조”로, “국고보조사업”을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법령,”을 “법령,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과금”을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부하여야”를 “대하여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30조제1항 중 “반환명령”을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로, “지방보조금에”를 “지방보조금의 교부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서명		정책기획관
입안자	부서장 직위 · 성명	정책기획관 이정훈
	팀장 직위 · 성명	예산팀장 최현주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문은혜 (790-568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하남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 -----.
제4조(보조대상 사업)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 -----제17조-----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 ----- ----- ----- 등을 고려하여 ----- -----.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②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하남시 지방보조금	④ ----- -----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 ④ (생략)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일자리
경제국장, 혁신기획관

2. (생략)

⑥·⑦ (생략)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
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
지 여부에 관한 사항

관리위원회-----.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법 제26조-----
----- 지
방보조금관리위원회-----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 정책기획관

2.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기능)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
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
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
진 때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
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
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
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
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 4. (생략)

제16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
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
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
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
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
--- 법 제7조제2항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교부결정) -----

----- 교부 여부를 --.

1. 법령, 조례 및 -----
2. ~ 4. (현행과 같음)

제16조(교부조건) ① -----

-----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
-----.

② -----

----- 수익이 발생하는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신 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

경우

제18조(교부방법)

추진상황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실적보고) ①

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
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
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
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6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
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
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 7. (생략)

③·④ (생략)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
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
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
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에 우선한다.

----- 정산보고서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운용평가) ① ----- 법 제27조--
-----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
사업-----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법령, 조례, -----

3.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지
방보조사업자에게 반환금, 제재부가
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
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과
금이나 그 밖의 채권-----.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생략)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⑥ -----

----- 대하여 교부하여야 -----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 「지방재정법」 제60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

-----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
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
부가금의 부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에 -----
-----.

② (현행과 같음)

1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 가. 교부현황
 - 나. 성과평가 결과
 -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 10. 16., 2021. 1. 12.>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3.>

[전문개정 2014. 5. 28.]

[제목개정 2015. 5. 13.]

[시행일 : 2021. 7. 13.] 제60조

부칙 <제17390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

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부칙 <제17892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32조의3제2항부터”를 “제37조의2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7조 및 제9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020. 3.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IV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3 지방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 가능

※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

-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